

서울시, 설 제수용품 최대 50% 할인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서울시내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할인 판매, 민속놀이, 경품증정 등 '설명절 특별이벤트' 행사가 진행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22개 전통시장에서 설 제수용품과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50~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시장별로 5만원 이상 구매 또는 제로페이로 결제한 소비자에게는 쇼핑용캐리어 총(1만개),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대형마트 휴무일인 넷째주 일요일, 27일에는 60여개 시장에서 영광굴비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122개 전통시장서 추가 73개 시장 2시간 무료 주·정차 허용

직거래 장터도 연다.

시는 또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기존에 연중 무료 주·정차를 허용한 서울 지역 내 42개시장과 추가로 73개 시장에서 주변도로 무료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 임시주차허용 시장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윤러 가격할인과 경품 증정 외 시장을 방문한 시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했다.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떡국 떡 썰기, 반두빚기 등 차례상차리기

부터 '떡메치기' '웃놀이' '제기차기' '팔씨름대회' 등 특색있는 민속놀이 이벤트가 시장 곳곳에서 펼쳐진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이번 설 명절 장보기는 전통시장을 이용해 소비자들은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상인들은 매출이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기 바란다"며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해 쇼핑용 캐리어도 받고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스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청계천·을지로 장인들과 상인들의 살아있는 역사를 보존하라' 집회에서 을지로 상인 김학렬씨가 발언하고 있다.

박원순, 을지로·청계천 재개발 제동 건 이유는?

작년 서울 3만2600개 법인창업...4.3% 반등

작년 서울 택시 승차거부 민원 급감...市직접단속 효과

작년 10월 430건→11월 326건→12월 307건



서울시내 택시 승차거부가 줄어들고 있다.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가져와 직접 단속을 시작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민원건수는 10월 430건, 11월 326건, 12월 307건으로 점차 감소했다. 12월 307건은 전년 같은 달 553건에 비해 45%(246건) 급감

한 수치다.

오인신고, 신고취소 내부결재 등을 포함한 전체 승차거부 민원신고 총 건수 역시 지난해 12월 524건에 그쳤다. 2017년 12월은 770건, 2016년 12월 787건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다.

이 같은 감소세는 택시 승차거부 직접 단속에서 비롯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11월15일 택시 승차

거부 처분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했다. 이후 시가 직접 승차거부를 단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운수종사자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대한 1차 처분까지 직접 집행했다. 시는 전체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재산정하고 지난해 12월 초 22개 업체에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연말 급증하는 택시수요로 인해 12월이 승차거부 민원이 한해 중 가장 많은 시기인데도 2018년에는 12월 민원 건수가 10월, 11월에 비해서 줄어든 것도 괄목할만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효성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승차거부 대책이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강력한 처분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울거리에서 승차거부가 사라져 시민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스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은 지난해 서울에서 창업된 법인 수는 총 3만2602개로, 서울 법인창업지수가 4.3% 상승해 전년 대비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의 법인 창업의 특징과 12월의 동향을 담은 '서울 법인 창업 및 일자리 동향 연간보고 및 12월호'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산업별로 ▲도소매업 7087개 ▲비즈니스서비스업 4228개 ▲IT융합 4016개 ▲금융업 3549개 ▲콘텐츠 1611개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 1213개 ▲도소제조업 842개 ▲관광·MICE 761개 ▲의기타산업 8743개가 창업됐다.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 산업은 전년 동월 대비 23.5%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도소제조업은 10.4%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0.9%, 금융업은 0.4%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1만330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남권이 9351개, 동북권 3728개, 도심권 3579개, 서북권 2639개 순으로 법인이 창업됐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창업된 법인 수는 2627개로 서울 법인창업지수는 5.6%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북권이 전년 동월에 비해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법인 창업은 동남권이 1023개로 가장 많았다. 서남권은 781개, 동북권 303개, 도심권 297개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 법인 창업에서 창업 건수가 가장 작은 서북권이 28.9%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동남권은 2.3% 감소해 서울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마디가 수년간 을지로와 청계천 일대에서 진행되던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을지로·청계천 재개발 사업을 한순간에 뜨거운 감자로 만든 발언은 16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당시 을지로·청계천 재개발 문제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질문 내용은 "을지로에 있는 노포라고 할 수 있는 양미옥, 을지면옥이 재개발지역에 포함돼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아서 결국은 철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을지로라는 곳이 갑자기 힙스터 플레이스 각광받아서 10~20대들이 공구상가 주변 맛집 등을 찾으면서 도심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청사진대로 개발되면 피맛골의 르메이에르 같은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어 "피맛골에 있던 청진옥, 미진 이런 곳처럼 (을지로 노포들도) 역사만 있지 걸모습은 다 잃어버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는 서울의 관광적인 매력을 반감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러자 박 시장이 반박했다. 그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안 그래도 2부시장에게 말하려고 했다"며 "과거의 문화나 예술 전통과 역사를 도외시했던 개발에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역사적인 부분 전통적으로 살려야 할 부분은 잘 고려해서 개발계획 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나아가 을지로·청계천 재개발 인가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그는 "적어도 제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것(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도시개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며 "가능하면 그런 것이 보존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돌발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이 발언이 서울시의 기존 방침을 뒤집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을지로·청계천에 지상 20층 인파 규모의 추상복합건물을 짓는다는 내용의 재개발 사업은 박 시장 재임기간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던 사업이다.

박 시장의 돌발발언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쪽은 재개발을 추진하는 건설사와 재개발에 찬성한 토지주들이었다. 이들은 '서울시 인가를 받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왔고 토지주 80% 이상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서울시가 입장을 갑자기 바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주일간 논란이 증폭되자 서울시가 23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미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곳의 경우 재개발을 허용하며 을지면옥 등 주민간 이견이 있는 구역의 사업은 연말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갑작스레 이 지역 재개발에 관한 입장을 바꾼 이유도 설명했다.

강병호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 계획이 수립된) 2014년 이후부터 공간뿐만 아니라 산업생태계와 생활유안 등에 관한 인식과 사회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민 인식이 달라졌다. 을지로 노거리 골목도 생활유안으로 지정됐다"며 "2014년에 생겼던 바깥의 빠른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여러 의견을 듣고 계획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가구 20%,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분거 가족'

경기도 내 10가구 가운데 2가구는 가족과 떨어져 사는 '분거 가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분거 가족은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다른 지역(해외 포함)에 사는 것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8월28일~9월11일

도내 3만7400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6만7054명을 대상으로 벌인 사회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다. 23일 밝혔다. 조사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0.7%p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 가구 가운데 6305가구(19.2%)가 분거 가족이었다.

이들은 가족과 떨어져 사는 이유로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 문제(54.2%), 학업(28.1%), 군대(6.8%), 가족 간 불화(5%) 등을 꼽았다.

분거 가족 비율이 가장 높은 도내 시·군은 포천시(30.0%), 가장 낮은 지역은 안양시(14.1%)였다.

국의 분거 가족 비율은 과천시(20.3%)로 가장 높았다.

뉴스스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